

매뉴얼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섬진강댐 수해 불렀다

정부 공식조사 결과 발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 유지

이상기후 반영 노력 전혀 없어

댐 운영관리·관련 제도

하천 정비·유지관리도 미흡

구례 주민 1000억대 배상 신청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총체적인 부실·댐 운영부터 홍수 관리 미비=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상류의 댐과 하류의 하

천 간 홍수방어 목표에 차이가 있었고, 지류 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과 하천의 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

하천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분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댐 하류별 상황을 보면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 지역 민원 등으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탓에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됐다.

◇구례 주민 1000억원 규모 환경분쟁 조정 신청=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정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약 1233억원)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은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구례 주민 1800여명은 이날 손해사정 기관 산정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를 토대로 1000억원 규모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서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피해가 발생한 주요 하천들의 임시 복구에는 홍수기 전 완료됐으며 하천 구조물 복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사업까지 복구작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

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역 단위로 하천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 민주당 복당 봇물

권리당원 기준일 맞춰 급증

10여명서 지난달 200명 육박

국민의당 등 출신 복당 주목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지난 달 30일 당원자적심사위원회를 열고 170여명의 복당 신청자 중 150여명에 대해 복당 자격을 부여했다.

복당자 대부분은 지난 선거에서 출마자 등의 권유로 입당했다가 탈당한 '단순 탈당자'들로, 사실상 일반 당원들이다. 이들은 선거 출마자들이 당원을 모집할 때 입당한 뒤 권리당원 자격을 얻어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이 끝난 뒤 당비 등을 내지 않고 탈당한 당원들이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 말(8월31일)까지 입당하고 내년 3월 이전에 6개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이달까지 복당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원자적심사위원회는 매달 1차례 열리고 있는데, 평소 10여명 수준의 복당 신청자가 지난달에는 200명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었다. 다음 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권리당원 자격일까지 마지막 심사인 만큼 신청자가 폭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복당 심사에서는 국민의당과

민생당 등 다른 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거나 당선됐던 경력자들은 복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복당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으로 당선된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정치인들의 복당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또한,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탈당해 당적을 바꿨던 지방의원들의 복당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일부는 '10년 이내 탈당자, 경선 25%까지 감산' 규정에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복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민주당 각 경선 후보들의 지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대선 전에 복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광주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향후 정치 행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복당 신청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타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들의 복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각 지역위원회 내부의 이해관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등 250만호 공급…국토보유세 도입”

‘기본시리즈’ 두번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에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권이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또 “땅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교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